

야권 “박 대통령도 수사하라” 요구

“‘최순실 게이트’ 몸통은 박 대통령”... “대통령 스스로 국민에게 고백하고 조사 받는 것 필요”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야권에선 박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최순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 문제의 가장 핵심 증인은 박 대통령”이라고 발언, 박 대통령 역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가 나서서 최순실이 원하는 재벌 모금을 강요하고 각 부처 인사를 최순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일련의 흐름에서 비선 권력이 큰 것”이라며 “따라서 반드시 대통령 스스로 국민에게 고백하고 스스로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으면 최순실을 포함한 각종 피의자의 범죄를 확정하기 어려워 처벌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고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들과 앞으로 처벌을 받을 대상자들의 범죄 혐의가 보다 명료해지도록 대통령이 조사를 받아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도 현안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피해자가 아니다.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허락한 박 대통령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며 “이 난국을 풀어낼 수 있는 건 최순실도 아니고 검찰도 아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은 박 대통령”이라고 가세했다.

기 대변인은 이어 “스스로 수사를



딸에게 보내는 엄마의 마음 전주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원하는 딸에게 보내는 엄마의 마음 사업에 기부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일 전주시여성자원활동센터 김영순 회장(가운데)과 회원 10여 명이 전주시청을 방문 '딸에게 보내는 엄마의 마음' 사업 후원금으로 새달라며 1,052,500원을 김승수 전주시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추석맞이 불우이웃돕기 바자회를 통해 얻은 수익금이다.

자정해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도리”라고 박 대통령이 나서서 검찰 수사를 받으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에선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국민 여론은 최순실에서 대통령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조사, 대통령의 진솔한 자백 및 수사 협조, 대통령의 탈당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특히 “우리 국민들은 하야와 탄핵을 외치고 전국에서 촛불을 밝히고 있다”며 “국면전환용 인사나 거국

내각으로 민심을 돌릴 수 없다. 박 대통령이 나부터 수사 받고 처벌 받겠다는 눈물의 호소로 마음을 움직일 때 대한민국이 살고 정치권도 사태수습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촉구했다.

야권 대선주자들도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스스로 관련된 사람들과 함께 검찰 수사를 받으시라”며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등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먼저 자청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박 대통령 ‘비선 최순실’의 연설문 개입을 시인하기 직전인 지난 25일 “특검을 포함한 성역 없는 수사로 짓밟힌 국민들의 자존심을 다시 세워야 한다”며 “대통령도 당연히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현행법상 대통령은 내란·외환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가 면제된다. 그러나 야권은 수사는 가능하다는 논리를 고수하고 있다. /뉴스1

전북도 농촌지역 상수도 보급률 2020년까지 87%로 끌어올린다

현재 80.5%서... 올해 150억원·내년 163억원 투자

전북지역 농촌 상수도 보급률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전북도는 80.5%에 그친 농촌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을 2020년까지 87%로 끌어올리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도내 도시의 상수도 보급률은 99.7%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150억원을 들여 연말까지 17개 농촌 마을에 관로 51km 등 상수도 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또 내년에는 163억원을 들여 23개 농촌 마을에 관로 78km를 설치하는 등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상수도 보급률을 높여 도·농간 격차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 등 섬마을에 저수지와 취·정수시설을 확충하고 누수율이 높거나 노후가 발생하는 무주군 장수군, 부안군에 총 749억 원을 투자해 노후관 103km를 교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2017년 식품소재·반가공 산업육성사업’

완주 봉상생강영농조합·정읍 다원에프에스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의 ‘2017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육성사업’에 전북지역 2곳이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월 4일 식품소재, 반가공산업 육성을 통한 국산 농산물 수요확대와 농산물 수급조절을 위해 영농 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농협 등 생산단체를 대상으로 반가공산업 육성사업을 공모했다.

그 결과 전북을 비롯한 전국 20개 업체가 신청했고 서면평가와 현장 확인, 최종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등을 거쳐 최종 10개 업체를 선정했으며, 전북에서는 완주 봉상생강영농

조합, 정읍 다원에프에스가 선정됐다.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총사업비 17억 원을 지원받게 되며, 정읍 다원에프에스가 10억원, 완주봉상생강영농조합이 7억원(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을 확보해 세부사업계획을 연말까지 마련한 뒤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이란 완제품에 사용되는 제분, 유지, 식품첨가물 등의 식품소재 및 반가공품(착즙, 건조, 추출, 농축, 분말 등 제품)을 생산해 식품, 외식기업에 공급하는 산업이다. /고민형 기자

전주시,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전주시가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한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경숙)는 이달부터 전주시에 주소를 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정의 0~12개월 영아에게 최대 1년간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사업을 전개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0월 이전부터 전주시에 주소를 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정으로,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등 주민센터에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기저귀 월 6만4000원, 조제분유 월 8만6000원이며, 수혜 대상자는 전자바우처 통합카드인 국민행복카드에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대 12개월분의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액 범위 안에서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

단, 조제분유의 경우 지원대상이 영아의 모유수유 권장정책에 따라 산모가 사망하거나 에이즈와 결핵, 항암치료 등의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입은 BC국민행복카드의 경우 우체국 소평물, G마켓, 옥션, 농협마켓, 나들가게, 이마트(오프라인)에서 구매 가능하며, 삼성국민행복카드의 경우 이마트(오프라인)에서만 구매가 가능하고, 롯데국민행복카드의 경우 롯데올마이쇼핑몰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 들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에 도움 되기를 기대한다”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이 개시되는 만큼 서둘러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희 기자

전북도 겨울학기 해외연수

8개 위탁업체 선정

전북도 인재육성재단은 지난달 2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2016년도 글로벌 체험 겨울학기 해외연수사업을 위탁, 대행할 평화항공과 투어비스타 등 도내 8개 업체를 선정했다.

심사는 전북도 인재육성재단에서 제시한 2016년도 글로벌체험 겨울학기 해외연수사업 비전과 목표, 달성과제, 성과관리방안, 특수시책, 안전관리 등에 대한 신청업체의 연수프로그램 전반에 대해 PT 진행과 심사위원들이 질의, 답변으로 진행됐다.

2016년도 겨울학기 해외연수는 캐나다 3개 그룹을 비롯 호주와 뉴질랜드 각 2개 그룹, 중국 등 총 8개로 그룹으로 편성됐다. /김민근 기자

공간정보연구원 청사부지, 혁신도시에 확보

한국국토정보공사, 산학연클러스터 부지 매입... 2017년 실시설계 완료 예정

전북도는 공간정보연구원(원장 신을식) 청사신축 및 연구시설 확충을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부지를 매입했다고 1일 밝혔다.

공간정보산업 ‘싱크탱크’인 공간정보연구원은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 산하 연구기관으로 현재 3개실 6개 팀으로 5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형 지적정보시스템, 공공유지 재산 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공간정보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이전해 혁신도시 내 임차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어, 높은 임대료로 인한 재정부담 및 연구업무 등의 이용불편이 많아 청사신축을 위한 이전부지 확보의 시급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LX관계자는 2017년에 연구원 청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재원마련 즉시 청사신축 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매입 부지면적은 2만9,252.5㎡로 향후 120여명까지 증원될 것을 고려해 공간정보연구원 청사건립 및 공간정보산업R&D 시설에 활용될 계획이다.

청사건립부지가 확보됨에 따라 향후 정부의 공간정보 산업분야 정책개발과 공간정보산업의 글로벌 리더로서 대한민국의 건강한 공간정보 생태계 구축에 앞장설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지역 대학 및 연관 기업과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인 공간정보 기술을 한층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 혁신도시 산·학·연의 대표모델로 전북을 글로벌 공간정보산업의 메카로 키워낼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순창군산림조합
조합장 김규철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